

목동에서 용산까지

글 · 어수갑 eohsg@kdemo.or.kr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펴낸 자료집 표지

용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 1월 9일 있었다. 이제 이승의 일일랑 그만 잊으라는 듯 그들과 그

들을 배웅하는 시민들 위에 훑날리던 눈발이 처연했다.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남긴 채 그들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들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에 희생이 된 예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목동 철거민 투쟁이 대표적인 경우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 말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합동재개발'을 도입했다. 무허가 불량주택의 재개발에 거대 건설업체를 끌어들이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는 참여조합원으로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한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은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먼저 불이익을 안겨 주었다. 투기꾼과 용역깡패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달동네 사람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야 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은 도시 미관을 이유로 서울시내 판자촌들을 강제철거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이러한 재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이 목동과 상계동이었다.

1983년 4월 12일 서울시는 토지공영개발방식을 시도해 신정동, 목동에 신시가지 140만평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목동 일대에는 가구주 2,500세대, 세입자 5,200세대, 약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양천을 옆에 끼고 형성된 긴 뚝방촌에 모여 살고 있었다. 이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여의도, 영등포, 아현동 등에서 철거되어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서민주택 대신 20~58평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가옥 당 이주비 50만 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제일 작은 20평형이 2,100만 원으로 가난한 주민들로서는 엄

두도 못 낼 금액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애초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서민주택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은 변경되고 싼 땅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정부가 돈을 벌어 올림픽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거기에 건설업체들에 대한 특혜와 건설업체들이 고용한 철거용역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들을 사지로 몰았다. 서울시가 목동 주민들에게 한 평당 7만원에서 14만원에 매입한 땅은 분양가격 평당 105만원부터 134만원으로 되팔도록 결정되었다.

이후 3년에 걸친 목동 주민들의 처절한 철거 반대투쟁이 시작되었다. 대책 마련을 위한 목동 주민들의 모임은 공권력에 의해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곤 했다. 주민들은 회장, 부회장, 총무, 통반장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공권력의 침탈에 맞서 철야경비조와 지역대기조를 운영하였다. 목동 주민들은 1984년 8월 27일 양화교 점거농성에서부터 1985년 3월 20일의 목동사거리 싸움까지 7개월 동안 무려 100여 회 이상의 가두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였다. 500~700명 단위로 신민당과 KBS 방송국, 영등포로타리 등에서 기습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낙선투쟁까지 전개하였다. 경인고속도로를 4번이나 차단하였으며, 15회에 걸쳐 서울시청 진격투쟁을 벌였다. 1985년 1월에는 시청 앞 농성으로 9명이 중상을 입고 항의 주민 수백 명이 연행 당했다. 3월 20일에는 서울 신정동·목동 철거민과 대학생 6백여 명이 '선대책 후철거'를 요구하며 야간시위를 전개하였다. 목동주민들은 구속자가 대량

발생하자 구속자석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목동 주민들의 투쟁소식과 구속사실을 선전했으며, 주민총회를 통해 자녀들의 등교거부투쟁도 벌였다.

이렇게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목동 철거민 투쟁은 80년대 빈민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들 철거민들의 투쟁으로 거주자들은 최초로 무허가주택의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세입자들은 10평 아파트 입주권과 가장 저렴한 이자로 이주비용을 융자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목동 주민들의 투쟁은 이후 전개되는 철거민투쟁의 모범이 되었다.

사료관에는 목동 신시가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1983년 7월 14일 생산한 <목동 신시가지 건설>과 1983년 12월 9일에 생산한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개요>를 볼 수 있다. <목동 지역 주민운동 조사서>는 손으로 기록한 일종의 실태조사로, 철거민의 삶을 계속 해 온 목동 주민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업자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진상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오히려 폭력범으로 몰려 구속당하는 목동 주민의 모습을 <호소문>은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만 소개하자. <다시 어디로 가야 하나? -목동·신정동 주민 이젠 오갈 데도 없다>는 안양천 변 움막집부터 시작해 어렵게 삶을 일궈오다 또다시 철거를 당하게 되자 이렇게 절규한다.

“재산세, 취득세, 하천부지사용료를 받아먹은 당국이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서울시가 시민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괴롭히려고 있는 겁니까? ... 20년 전 우리들을 청소차로 허허벌판에 내던

져 버리고 나서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부대 주어 보았습니까? 못나고 무식한 게 죄 인줄 알고 그냥 말없이 사는 우리들을 왜 못 잡아 이럽니까?... 우리가 언제 신시가지 개발하자고 했습니까, 아파트를 달라고 했습니까?”

목동에서 용산까지 사반세기의 세월은 우리 사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구조적 모순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내팽개쳐진 채 오로지 모든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어보려는 저급한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한 이런 일들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1차적 책임주체인 정부가 이를 통감해야 한다. 서민들의 땀을 빼앗아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재개발이라면 사회통합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만날 길조차 없어 보이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다음에 인용하는 글이 그것을 보여준다.

“지독한 계급지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들이 세력을 이루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갖추지 않으려는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연대’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철거민이고, 철거민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민중이고, 시민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인식은 존재에 충실하지 못한다. 존재는 철거민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굳이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허위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저들 지배세력이 심어놓은 허위의식이다. 그 허위의식을 깨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용산투쟁이다.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인 우리는 ‘연대’ 해야



목동 주민들의 시위장면



목동 철거와 관련한 성명서와 셋방살이 어머니의 호소문

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에서 인용)

이것이 용산의 교훈이고 지난 시기 목동과 상계동의 경험이다.

용산참사 이후 희생자 다섯 명이 병원의 냉동고에서 마석의 언 땅에 묻히기까지의 1년간의 간고한 투쟁은 후일 민주화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3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공개를 통한 과잉진압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재개발정책을 바로잡는 숙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열달간 용산 참사현장을 지킨 ‘거리의 사제’ 문정현 신부는 “용산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고 있다”고 말한다. 2천년 예수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답은 이미 있다.

무지와 무관심, 독선과 만용, 야만과 폭력, 대화와 타협 아닌 일방적 밀어붙이기, 눈먼 자본과 권력의 광기

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자기성찰과 공공선을 위한 절절한 기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과 인권에 대한 사랑과 헌신, 연대와 희망이 불에 타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싹을 틔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설적이게도 용산은 우리에게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곳에서 조차 희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듬어야 할 민주화운동사의 세목(細目)은 종종 어둡고 끔직하고 폭력적이며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기도 한다. 기억의 뒤란에 묻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과 대면해야 하는 것이 또한 역사의식을 잃지 않는 깨어있는 자세다. 오래전 사마천이 갈파한대로 “역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필주를 가함으로써 있어야 할 모습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힘이 없어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지키려다 생명마저 놓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